

■ 일본 경제산업성, 안정적인 화석연료 공급 확보 정책 방향성 논의

- 일본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CO₂를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에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배출권거래제도 참여를 의무화할 방침임.¹⁾
 - 일본 정부는 2026년부터 최근 3년간 CO₂ 평균 배출량이 10만 톤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도 참여를 의무화할 계획임. 의무 대상 기업은 약 300~400개사로 일본 전체 CO₂ 배출량의 약 60%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음.
 - GX리그에 따르면 배출량이 10만 톤 이상인 기업은 JERA, NIPPON STEEL, Mitsubishi Chemical, Sumitomo Chemical, TOYOTA 등임.
 - 한편, 산업계에서는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에 따라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음. 이에 경제산업성은 GX경제이행체의 지원을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는 방침도 검토할 것임.
 - 일본철강연맹은 제조 공정에서 필요한 화학반응에 석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탈탄소 기술 도입이 어렵다며 '제품에 소요된 친환경 비용을 가격에 전가하여 회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'는 의견을 제시함.
 - AsahiKASE는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으로 일본 산업이 불합리한 경쟁 환경에 놓이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.
 - GX경제이행체를 활용하여 탈탄소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, 일정 수준의 추가 배출권을 할당할 방침임. 이는 기업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여 배출권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 보다 기술 개발에 대한 자금 투자를 우선시할 목적임.
 - GX추진기구는 2027년에 기업 간 배출권을 거래하는 거래소를 개설할 계획이며, 도쿄증권 거래소가 운영을 담당할 예정임. 일본의 경우, 기업의 탈탄소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당초에는 현물거래에 한할 것임.
- 일본 정부는 'GX(green transformation) 실현을 위한 기본 방침(2023년 2월 각의결정)'을 통해 배출권거래제도를 3단계에 거쳐 실시할 방침을 제시하였음. 업종별로 연간 배출량을 할당하고 배출감축 대응을 요구하는 동시에 탈탄소 기술 개발을 촉구할 계획임.
 - (1단계:2023~2025년) 적극적으로 탈탄소 대응을 실시하는 일본 기업(2024년 1월 기준 약 600개사)으로 구성된 GX리그 내에서 배출권거래제도의 시범 운영이 개시됨.
 - ※ GX리그에 참가한 기업은 자율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 및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할 시에는 배출권 거래 실시 상황을 공표해야 함.
 - (2단계:2026년 이후) 일본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할 것임. 배출권을 초과한 기업은 타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배출 감축 효과가 인정되는 크레딧을 구입할 필요가 있음.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, 초과분에 대한 부과금을 지불할 필요가 있음.

1) 大阪ガス, 2024.2.26., 日本経済新聞, 2024.11.22.

- (3단계:2033년 이후) GX추진법을 개정하여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배출권의 유상 할당을 개시할 것임.